

프로스포츠 응원단장 한재권
(환경조경디자인학 1997) 동문 | 10면 인터뷰

국제캠 응원단 '컬스라' 출신
프로스포츠 응원단장 한재권 동문.
25년째 경기장 위에서
팬들과 교감 중인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봤다.



의료 대란에 지친 간호사들 | 2면 이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원의 재정난. 간호사들은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제 1720 호
2024년 4월 1일 월요일

대학주보



제17대 김진상 총장
임명식 열려

지난 27일, 제17대 김진상 총장(왼쪽)의 임명식이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김 총장은 '공명과 변전, 웅비하는 경희'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 속 함께하는 공명으로 경희대학교가 웅장하게 비상하게끔 초석을 다지겠다"며 각오를 드러냈다.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오른쪽)은 김 총장에게 "대학 조직 운영 경험으로 미래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문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의대 증원 문제가 정치권과 의료계 갈등으로 변한 상황이라 이제는 학교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앞으로 정치권이나 그 외의 문제에 변화가 생기면 달라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현 상태를 예의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26일 사직서 제출 결의
의사로서 사직 일수도?
의대 교수 85% 임상교수

한편, 정원 배정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학교 의대 교수회의는 지난 26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단축 근무에도 돌입했다. 또한 의대 교수 중 50%가량이 병원 의사직에 대한 사직도 표하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12일 의대 교수회의가 발표한 3차 성명문에 따르면 전공의 면허정지 혹은 형사 처벌이 결정될 시 사직서 제출 등의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정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기도 했다.

의대 교수회의 김우식 의장은 “선생님들과 사직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금, 토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고, 사직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다. 사직서는 각자 알아서 내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65%)의 93%가 단체행동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90%는 단체행동 방법으로 사직서 제출을 택했다.

의대 교수 사직이 교수로서의 사직인지, 의사로서의 사직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병원 근무를 그만둘 것인지, 교수로서 사직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50대 50이었다”며 “어쨌든 사직서를 제출할 때 전공 의와 학생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병원 업무는 계속 보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의대 교수 정원은 317명이며 이 중 47명을 제외한 모두가 진료를 보는 임상 교수다.

김 의장은 정부가 어떻게 나와야 사직을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 안 되면 총선 이후에 논의를 진행하고 총선 전까지는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 '0명', 의대 교수 사직 결정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장해린 기자 sunblessyou@khu.ac.kr

우리학교가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에서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우리학교 의대 교수회의는 '0명'이라는 배정 결과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권 대학 증원 없었다
21개 대학
우리보다 입학 정원 많아져

지난 20일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는 82%에 달하는 1,639명이, 경기·인천 지역 의대에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배정됐다.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 정원은 100명 정도로 2배가량 늘어났다.

우리학교를 포함한 서울 소재 8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가톨릭대, 중앙대, 이화여대)은 총 365명 증원을 신청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2025학년도부터는 21개 대학이 우리학교보다 많은 의대 입학 정원을 배정받게 된다. 기존엔 전북대, 조선대, 전남대, 부산대, 서울대를 이은 6번째였지만 이번을 계기로 '미니 의대'가 돼버린 셈이다.

이번 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의 발전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병원의 발전 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 80%를 우선 배정한 결과로 보인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인천 지역에만 인원을 배정한 것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의료편차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원 확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

서를 기반으로 교육 여건과 개선의지,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살펴봤다.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
결과 듣고 허무했다”
증원 신청 규모에 대한 비판도

학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전략기획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우리학교는 메디컬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는 학교라 타교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인원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쟁력을 포함한 여러 다른 이유로 항상 증원을 바랐는데 0명 결과를 듣고 허무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총장실도 같은 반응이다. 총장실 이영주 실장은 “0명이 배정될 줄

알았으면 증원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소한 신청 인원의 절반은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만, 애초에 증원 신청 규모가 작았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했다. 실제로 3월 20일 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에 정원을 배분하지 않은 배경에 “당초 적은 숫자라도 배분하려고 했는데 배분 과정에서 지역 균형 원칙이 더 강조되면서 방침이 바뀌었다”며 “서울 지역 의대의 경우 신청 규모도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장실 이 실장은 “서울권 다른 의대 중 큰 규모로 증원 신청을 한 대학이 분명 있을 텐데 아무도 배정받지 못한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규모가 작아서 배정을 못 받았다는 입장에는 모순이 있다”며 지역 의료 편차가 정부의 주요 배정 기준이었음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전략기획팀은